

## 1강 - 교사의 신분보장

###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임용 :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 직위 :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 복직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강임 :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 휴직 [休職]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쉰. 병이나 사고 따위로 인하여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 등이 그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쉬는 것을 이른다.
- \* 면직 [免職]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 \* 권고사직 [勸告辭職]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 \* 징계처분 [懲戒處分]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내리는 행정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 \* 약식명령 [略式命令]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 \* 약식절차 [略式節次]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단한 형사 재판 절차. 이 절차로 하는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 \* 정식재판 [正式裁判]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불복하여 법정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여 행한다. 정식 재판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에 청구한다.
- \* 재심 [再審]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 임면 [任免]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신분보장 [身分保障] 공무원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형(刑)의 선고, 징계 처분,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

### ■ 사례 :

#### <사건의 개요>

여교사 A는 4세 된 딸이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A는 얼마동안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의 경력은 인정되나요? 봉급은 지급되나요?

#### <이 사건의 쟁점>

교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는 방법 중 하나인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결말>

A는 “1년 이내(2년 연장가능)”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보수는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10할을 인정”해주며, 봉급은 “최초 1년간 월50만원의 수당”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의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교원의 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이나 여자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여자 공무원은 2년 연장가능)”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보수는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10할을 인정”해주며, 승진에서는 “최초 1년 이내 인정”해주고 있으며, 봉급은 “최초 1년간 월50만원의 수당”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원과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사례해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교원의 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이나 여자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여자 공무원은 2년 연장가능)”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보수는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10할을 인정”해주며, 승진에서는 “최초 1년 이내 인정”해주고 있으며, 봉급은 “최초 1년간 월50만원의 수당”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원과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1. 교원의 신분보장 개념

교원의 신분보장이라 함은 교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감임 ·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교원의 신분보장 관련 법규

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감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과 제3항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교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신분은 여타 공무원들의 신분보다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공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 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폐에 의해서 폐직이나 과원이 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는 교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불가한 면직의 사유로서 첫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둘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셋째,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넷째,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다섯째,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위해제의 사유는 첫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둘째,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셋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등이 열거되고 있다.

### 3. 교원징계 관련 법령

가. 징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는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므로 일반통치권에 의해서 국가사회의 일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과 다르다. 따라서 동일행위에 대해서 징계와 형벌이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그리고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징계는 신분변동 등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교원 징계시에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징계절차는 이른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원의 징계시에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당하지 아니하며, 고지 및 청문의 기회는 기본적 인권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교원의 징계에 있어 혐의당사자는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당했을 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국 공립학교 및 그 교원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국가가 국 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사

립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 균형있게 감독을 하고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행정심판에 유사한 구제절차이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육을 통해서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그 직무의 성격상 여타 공무원보다 더욱 강화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반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라는 법적 재제가 가하여 진다.

#### 4. 휴 · 복직

##### 가. 휴직 제도의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 계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나. 휴직의 효력 및 복직

###### (1) 휴직의 효력

- 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②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 ③ 휴직 중에도 정년퇴직, 명예퇴직,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함.

###### (2) 복직

- ①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 ②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하면 당연 복직

###### (1) 직권휴직

휴직사유 발생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면권자)

###### (2)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면권자)  
 ↑  
 휴직사유 및 관련서류

##### 다. 휴 · 복직 사유 및 기간

구분	휴직종류	휴직조건	휴직기간	경력인정여부		봉급	구비서류
				보수	승진		
직 권 휴	1. 질병휴직 (요양) (공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 공상으로 장기 요양	1년 이내  1년 이내	불인정  인정	제외  인정	7할 (결핵성:8할) 전액지급	휴직원 진단서 (공상증명서)
	2. 병역휴직 (병역)	•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복무기간	인정	인정	불지급	휴직원 입영증명서

직	3. 생사불명 (행불)	•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	3월 이내	불인정	불인정	불지급	휴직원 증빙서류
	4. 법정업무 수행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복무기간	인정	인정	불지급	휴직원 증빙서류
	11. 노조 전임자	•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인정	인정	5할 지급	휴직원 전임자허가서
청 원 휴 직	5. 유학휴직 (연구·연수)	• 학위취득 목적 해외유학 •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인정	5할인정	5할지급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구분	휴직종류	휴직요건	휴직기간	경력인정여부		봉급	구비서류
				보수	승진		
청 원 휴 직	6. 고용휴직 (외국기관고용)	• 국제기구, 외국기관, 제외국민교육기관 임시 고용	고용기간	인정 (비상근은 5할)	인정 (비상근은 5할)	불지급	휴직원 고용계약서
	7. 육아휴직	•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이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자공무원은 2년 연장 가능)	최초 휴직일부터 1년 이내 10할 인정	최초 1년 이내 인정	최초 1년간 월 50만원 (수당)	휴직원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8. 연수휴직 (국내연수)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3년 이내	학위 취득시 재확정	5할 인정	불지급	휴직원 입학허가서
	9. 간병휴직 (가족간호)	• 사고, 질병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이내)	불인정	제외	불지급	휴직원 진단서 간병확인서
	10. 동반휴직 (가족동반)	• 배우자 외국 근무,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불인정	제외	불지급	휴직원 증빙서류

## 5. 사학교원의 법적 신분

가. 국·공립학교 교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과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국가의 공무원 임명과 이에 대한 동의라는 법률관계를 통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는 그 학교의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법적 근거 역시 학교법인과 맺는 사법상 임용계약에 있다. 구체적으로 사인인 설립자가 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세운 사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이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다른 사인을 학교장 및 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교육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가 학교장 및 기타 교직원의 임면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립학교 교

원은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1) 학교법인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인이고,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한다(헌재 1998.7.16. 96헌바33 등).

(2) 사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라는 신분관계를 갖는다(헌재 1997.12.24. 95헌바29 등).

(3)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55571판결).

(4)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2.12. 92누13707 판결).

(5)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며, 해임관계도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1963.2.14. 판결 62다444).

## 6. 교사의 수업권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교사의 수업권을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으로 규정했다. 수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제시하고,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교사의 수업권에 대해 현재는 국가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국민의 수학권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수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의 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을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7. 교원의 주의의무와 교권

교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체벌과 위협요인이 있는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이나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벌과 관련된 사고는 교원의 징계권 행사를 지나치게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의무만을 강조하고 또한 너무나 폭넓게 부여된 교원의 주의의무의 책임은 교원의 권리인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을 살펴보면 교사를 고소하고 폭행범으로 취급하는 행위, 언론에 보도하여 사건을 확대하는 태도는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교원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 범위도 너무나 과도하게 부과해서 교원들의 교육권 행사를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훈육적 체벌에 의한 사고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원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여 교원들에게 제2의 피해를 유발하고, 또한 최근에는 언론에도 보도됨으로써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위축당하고 있다고 본다.

## ■ 학습평가

**문제 1.** 다음 중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하여 해임된 교사
- (2) 재직 중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 파면된 교사
- (3) 재직 중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를 하여 해임된 교사
- (4) 재직 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

해설 : 정답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에서는

①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2. 금품수수 행위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2.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4)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해설 : 정답 (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에는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3] [1997·1·13 법률 제5274호에 의하여 1994·7·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항 단서를 삭제]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90·4·7]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 3. 기간제교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3)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된다.
-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임용되었던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해설 : 정답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4.** 교사 A는 소속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및 비리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A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학교장의 조치는 정당한가?

해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2항에서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A에 대한 징계조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위반의 부당한 조치이다.

## ■ 학습정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4조),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며,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

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제6조)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